

다산포럼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작년 계엄 선포에서부터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의결,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 서부지법 난동, 탄핵 찬반 시위와 탄핵 결정,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과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분명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몇 차례에 걸쳐 경험했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없다.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되지만, 대선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도 적지 않다.

그런 무엇이 문제였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점은 리더십의 문제였다는 점이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갑자기 비정상적 상황이

같이 노래할 수 있는 리더십

발생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은 시스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점검은 이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집권했던 박정희 정부 시기를 보면 리더십 문제가 잘 드러난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몇 차례의 변곡점을 거치면서 변화했다.

첫 번째 변곡점은 1969년의 3선 개헌이었다. 3선 개헌을 통해 박정희에게는 더 이상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김종필의 날개가 꺾인 것이다. 1961년 군사정변에서부터 1964년 6.3사태까지 주한미군대사관은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김종필의 힘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1963년과 1964년 두 차례에 걸친 김종필의 외유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고, 외유 기간 동안 민주공화당에는 김종필에 반대하는 파벌이 형성되었다.

문제는 김종필이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자 더 이상 박정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1971년 갑자기 발표된 비상사태 선포와 1972년의 유신선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옆에서 제어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한국의 지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과 1972년 김학렬 경제기획원 부총리의 사망이었다. 김

학렬은 박정희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릴 정도로 경제 정책 분야에서 많은 조언을 했던 인물이었다. 김학렬의 사망 이후 박정희는 더 이상 주변 인물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후반부터 주요 경제정책이 관련 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결정되기 시작했다. 부실기업처리반도, 경부고속도로 추진반도, 군수산업 정책 결정 과정이 모두 청와대로 집중되었다. 한국 거버넌스의 상징이었던 관료제도가 무너지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화가 시작되었다.

논어 술이편에 ‘공자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노래를 불러서 잘하거나 반드시 그로 하여금 반복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와 합창을 하셨다’(子與人歌而善必使反之而後和之)는 말이 있다. 남의 잘함을 인정하고, 그의 얘기를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다면, 어떤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까? 비단 이뿐만이 아닌 리더십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1960년대가 민주적인 시대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자정력을 잃고 귀를 닫은 리더십이 미치는 치명적 결과를 보여준다. ‘아니오 옳다!’를 용납하지 못하는 리더십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NGO 칼럼

자립준비 청년들의 ‘아보하’를 위하여



마수진
광주청년센터 주임

‘아보하’라는 말이 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으로 무탈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된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 평범함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고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 보호 체계에서 자란 후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는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평균 1000만원), 자립수당(월 50만원), 주거·생활이나 취업,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퇴소 이후 주거 계약부터 공과금 납부, 식비와 교통비 마련 등 일상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정서적 지지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조차 벅찬 과제가 된다. 일부 청년은 당

장의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가족에 의해 유용 당하기도 한다. 또래 일반 청년들이 가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며 ‘비밀 언덕’을 갖는 것과 달리 자립준비청년들은 그런 안전망 없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20년 ‘보충종료야동 자립설치 및 육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33.4%)을 차지했다. 이처럼 정책상 지원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이유로 꼽히는 것은 지원이 단기적이거나 정착 초기 중심에 머물러 있고, 청년들의 실제 생활비 지출 구조나 위기 상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돕는 전담 인력은 얼마나 될까. 2023년 기준으로 약 1만 1400명의 청년을 161명이 담당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1명 수준이다. 전남은 1명이 136명을 맡고, 강원은 94명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처우 또한 열악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정서적 지원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과중한 인력 부담은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신리 관계 형성과 심리적 돌봄까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지원 제도 접근성도 여전히 큰 과제다. 정부는 ‘자립정보’이라는 자립준비청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사업 및 생활 정보를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탐색과 활용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어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거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일수록 필요한 지원을 놓치기 쉽다. 실제로 생계유지를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청년들은 지원 정보를 확인할 여유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식의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는 정책의 중심축을 ‘나이’가 아니라 ‘삶의 속도’로 전환해야 할 때다. 청년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29세까지는 주거·생계·진로·심리 등 전반에서 보호망 안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과 멘토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최소한의 조건과 일상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 기회와 환경을 자립 시기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는 이를 함께 보완해 나갈 책임이 있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사회와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해 청년 곁에 오래 머물며 동행해야 한다.

여전히 ‘아보하’조차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립준비청년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때다.

社說

‘도심 화약고’ 금호타이어 이전 계기 삼아야

광주 광산구 도심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 화재를 계기로 이전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는 주불은 잡혔지만 어찌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있다.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과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전은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회사측이 2022년 공장 용도변경 계획을 담은 이전 방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뒤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빛그린산단 매입계약(50만㎡·1161억원)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토지 매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이전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현 부지에 신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평 밧그린산단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회사측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가 수습되면 곧바로 돌 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전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현 부지에 신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평 밧그린산단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회사측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가 수습되면 곧바로 돌 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호타이어가 자체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지으면 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현 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개발이익만 챙기고 막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우려다.

이전 해법의 키는 금호타이어가 쥐고 있다. 회사측의 의지가 지금 중요한데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이전이 힘들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 ‘도심 화약고’를 불모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광주시의 양보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사고 수습 후 곧바로 성의있는 이전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광주시도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금호타이어 이전을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되 이전 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에 맞춰 우려를 잠재우면 될 일 아닌가.

李 광주군공항 이전 ‘3원칙’ 공약이 해법 되길

광주-전남 공동 현안 가운데 최대 난제인 광주-민·군 통합공항 이전 해법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제가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충분히 대화하고 방향을 찾고 이해를 조정해 신속히 공항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낀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으로 갈등 조정 ▲무안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이른바 이전 ‘3원칙’을 제시한 것인데 답보상태에 놓인 공항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에 전남도는 어제 환영 입장을 내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

장은 고민을 풀어주는 의미있는 공약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반겼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 설득 등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무안군은 공약에 불год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인데다 3원칙이 현실성이 높아 대선 이후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전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에 떠넘겨 갈등만 키웠다.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도 광주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사정이 비슷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도 국가 주도로 1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전례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공항 이전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無等鼓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추진했던 ‘대통령 후보 교체 시도’의 명분은 이른바 ‘범보수 빅텐트’였다. 빅텐트(Big tent)를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항할 범 보수 후보를 융합해 내면 이재명 대세론과 맞설 수 있다는 인식의 만들어진 막장극이었다. ‘커다란 텐트’ 아래 모여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필패(必敗)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이뤄진 시도였다.

빅텐트는 원래 유랑 서커스단의 큰 천막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흑인, 백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빅텐트 안에서 공중극, 동물 묘기 등의 공연을 즐겼다. 이 단어는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을 포용한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됐다. 특히 미국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과 관련,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제 영입을 통해 대세론을 형성하자라는 구상으로 ‘빅텐트’가 언급되면서 보다 대중화됐다. 이전에는 보수 공화당 소속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한 진보 인사들을 끌어들이던

시 사용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정치권의 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빅텐트’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언급하면서 빅텐트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선 윤용 빅텐트 얘기 뿐이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으로 전두환 동거인 정호용을 선거대책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한 것도 보수를 재건하려는 빅텐트 구상의 일부였다. 45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

시 광주시민 가슴에 총칼을 찔른 학살 현장의 책임자를,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표를 얻었다며 빅텐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도 선대위에 합류시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전두환도, 윤석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과거 내란 세력과 현재 내란 세력을 모두 빅텐트에 모으려는 발상 아닌가. 이대로라면 그 텐트, 국민들에게 찢겨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초심은 지켜지고 있나



전경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짧은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우리 헌정질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조문의 문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근본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사에 따라 권력이 위임되는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오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3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3심제는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을 적용하는 1심과 항소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2심으로 모두 사실심에 해당된다. 마지막 3심은 대법원이 맡아 사실심(1심·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9월 만에 선고하였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법률심의 범위를 넘어 사실 관계 판단에 개입하며 3심의 원칙을 흔들었다. 이것은 법원 본래의 역할과 3심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행태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같은 법관들조차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로부터 ‘과적불납리 이허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비난을 초래하고 그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에 의심받을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는 특히 대법관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이다. 대법관의 신중한 행동은 개인적인 품성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때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었을 때 겪었던 끔찍한 비극을 잊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처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관이 지켜낸 것이 아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위해 거리로 나와 피로써 쟁취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으며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가 신성한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특정 세력의 이해에 기울어 판단을 내리는 모습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철저한 재발 방지를 통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존엄한 명령과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존재의 이유는 무너질 것이다. 다가오는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 회의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7-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